

마늘 재배농가 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3	제안년월일 : 2002. 7. 20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회		

1. 주 문

- 중국과의 마늘 수입 자유화를 전면 백지화하고 국내 마늘재배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 제안 이유

-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마늘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함

3. 참고 사항

“ 없 음 ”

마늘 재배농가 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국회의장,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대표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자유민주연합총재,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고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농민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도내 마늘재배 농가들은 1999년 말 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가 시행된 이후 재배 면적을 줄이고 품종개량, 영농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등으로 단위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은 중국산 마늘과의 경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농민들은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1999년 당시를 생각하며 산업피해 구제 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때에 정부가 2000년 7월 중국과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2003년 1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합의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랍니다.

지난번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마늘 파동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하여 도내의 관련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자세와 우리 농민을 기만한 행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사로서 우리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함께 마늘재배 농가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마늘 협상은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협상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 협상은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마늘 수입자유화를 전면 백지화 하라.

당시 중국과의 마늘분쟁 협상과정에서 원칙적인 문제의 해결책보다는 봉합에 그치는 수준이었는 바, 밀실에서 비공개로 체결한 협약은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셋째, 마늘재배농가 피해 대책을 강구하라.

중국산 마늘이 내년부터 대량 수입되어 국내 마늘 시장을 잠식할 경우 마늘재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마늘 재배 농가에 대한 특

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협약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해야 한다.

넷째, 농정시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농정시책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도의회는 타 시·도의회 및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2002년 7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